

‘국민의 정부’의 대학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대학원중심대학’ 논의와 대학원 구조개혁의 방향

강 내 희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요즘 대학사회에서는 ‘대학원중심대학’을 둘러싼 논의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2일 “앞으로 전국 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원 대학과 교육중심 학부 대학으로 이원화하고 일반직업인 양성에 집중할 교육중심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에 대해서는 과정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도록 유도”한다는 방침(한겨레신문, 1998년 8월 3일)을 밝힌 데 따른 여파다. 교육부 발표 내용을 미리 알았던지 지난 7월부터 이미 몇몇 대학들은 대학원중심대학으로 발전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서강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이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학부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원생 비율을 높여 대학원을 대학 운영의 중심에 놓

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서울대, 포항공대, 과기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하여 내년 예산에서 2,000억 원씩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여(한겨레신문, 1998년 9월 3일) 대학 이원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학을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서울대학교가 1979년 대학발전10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발전 목표를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잡은 바 있고, 1987년에는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국제 수준의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성장한다는 포석을 제시한 바 있으며, 여타 대학들도 대학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오던 터였다. 그러나 그 동안 ‘대학원중심대학’ 발전안은 구호 아니면 희망사항이었을 뿐 추

진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한 대학들은 별로 없었다. 교육부가 일부 대학들을 연구중심대학 혹은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선정하여 재정 지원을 한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증거로 보인다.

새 국면의 전개는 최근의 사회정세적 변동들의 결과로 보인다. 대학사회가 사회로부터 변화의 요구를 받고 있다는 조짐은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안이 마련되면서부터 분명해졌다. 당시 교개위는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공급자보다는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을 시키고자 학부제를 도입하는 등 대학의 편제를 바꾸고, 또한 대학교육의 수월성(秀越性)을 이룬다는 정책 방침과 목표를 정한 바 있다. 이런 정책의 설정은 우리 사회가 이전과는 다른 유형의 사회적 기능을 대학에 요구하는 데 따른 대응으로서 대학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국민정부'가 등장한 후에도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 '대학원중심대학'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겠다는 교개위의 방침이 대체로 그대로 이어져 더 큰 구체성을 띠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원을 중심으로 삼는 대학들을 두겠다는 입장은 기존의 대학정책 방향과는 다른 기조로서 최근의 사회적 변동에 대한 대학정책상의 대응이다. 지난 40년 가까이 한국사회는 고도성장이라는 사회발전의 기조에 따라 대학정책을 펼쳐왔다. 1970년대 이후 고학력 노동자의 양성과 수급이 사회적으로 요구됨으로써 대학 난립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1980년 이후 대학의 신설과 정원 증가가 빈번해져 대학생인구는

급증하였다. 하지만 모두 알듯이 대학들은 이런 급속도의 양적 팽창에 걸맞은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경제의 고도성장을 그대로 답습한 대학은 경제가 허장성세 이후 위기를 맞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형국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사실 대학의 위기는 경제위기 이전에 감지되었다고 해야 한다. 한국 대학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벌써 오래 전에 확인된 사실이다. 대학정책의 변화는 이런 지식생산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삼고 있고 좀더 넓게는 사회변화에 새롭게 적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적 성격의 고도화에 따라서 새로운 종류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서 있다. 이제껏 유지해온 대학의 제도들, 관행들, 학문운영 방식, 교육방식 등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인 것이다.

대학 내 대학원의 중심성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은 그 동안 한국 대학들이 학부교육에 치중하던 관행의 수정을 의미한다. 한국의 대학들은 고학력노동자의 과잉공급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만 관심을 집중했을 뿐이다. 대학원은 그래서 늘 냉대를 받거나 뒷전으로 내몰려왔다. 국내 대학 중 대학원전임교원 제도를 두는 경우가 아예 없거나, 있다 해도 극소수인 것이 그 한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원중심대학' 정책이 등장한 것은 새로운 대학운영 기조가 제출되었음을 의미하는 듯싶다. 새 기조는 대학의 발전 목표가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성장임을 말해준다. 대학의 질적 성장에서 대학원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원은 어떤 사회든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연구 및 기술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

하는 데 핵심적인 사회적 제도다. 대학원이 대학사회 주변부로 내몰리면서 우리 사회는 그 동안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국내의 우수한 대학을 졸업해도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와야 더 나은 학문을 익힐 수 있는 오늘의 상황은 이런 시스템의 부재, 특히 대학원의 부실함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엘리트를 양성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가 지적인, 나아가 문화적인 독립성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다. '대학원중심대학'이란 구호로 대학원교육의 정상화와 수월화라는 목표가 설정된 것은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대학원중심대학 정책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대학원중심대학을 육성하자는 정책은 한국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경쟁논리는 대학이라는 특수한 사회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학교육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가 깊어지고, 'IMF 관리체제'가 전개되면서 개인 혹은 집단, 나아가 국가 차원의 경쟁력은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요 과제다. 대학들의 연구 및 교육 수준과 경쟁력이 형편없이 낮고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무능과 부실, 부정과 비리에 찌든 대학의 몰골은 이제 숨길 수도 없고, 그대로 둘 수도 없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질 향상과 함께 대학의 내실화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래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그렇다고는 해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

으로 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오산일 것이다. 교육부는 국내 대학들의 교육 수준이 너무나 낮다는 데 대해,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세계 800위에 들어가는 국내 대학이 하나도 없고, 아시아권에서도 15위에 드는 대학이 없다는 보고를 인용하며 대학의 부실을 질타하기도 한다. 최근 교육부장관은 소수의 연구중심대학과 다수의 교육중심대학, 혹은 기술중심대학으로 대학들을 양분시켜 연구중심대학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한다(교수신문, 1998년 8월 30일). 그렇다면 교육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소수 대학들에 '연구중심대학'으로, '대학원중심대학'으로 발전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일부에 혜택을 주고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변명이 뒤따르기는 한다.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을 대학들에 골고루 나눠주다가는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대학들을 하향평준화하기보다는 소수라도 우수대학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일부 대학에만 재원을 몰아 지원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대학원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이라는 구호는 과연 올바른가? 알다시피 국내에는 수많은 대학들이 있다. 현재 4년제 대학만 하더라도 180여 개에 이르며, 이들 중 내실을 갖춘 데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고, 대학으로 존립해서는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대학들을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따라서 가능성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부 소수대학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대

학들을 양분하여 소수의 연구중심대학과 다수의 교육 혹은 기술 중심대학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 사회의 엘리트를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등장한다고 본다. 흔히 우리는 전문적 식견과 기술, 학식을 갖춘 능력 있는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엘리트의 미형성을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일리는 있으나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다. 엘리트 부족을 한탄하며 고등교육 수료자를 무조건 양산하고, 국립서울대학교를 중점 지원하여 지도자 집단을 키워내는 일이 급하다는 주장이 한동안 나왔지만 그런 종류의 주장은 해방 이후 얼마 동안 통용될 수 있었다. 지금은 그럴 수 없다. 1980년대 이후 대학교육이 대중교육으로 전환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엘리트 부족 문제만을 겪고 있지 않다. 이미 형성된 엘리트집단의 비도덕성, 무능력, 편파성 등으로 오히려 더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제는 엘리트층을 충원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충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기울일 때다. 엘리트층을 뽑는 방식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과거 신분사회처럼 양반이나 귀족과 같은 특정 세력에게만 엘리트가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혹시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발상에 반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인 태도가 깃들여 있는 것은 아닌가? 대학을 양분하고 차별화 하겠다는 말을 '국민정부'의 교육부장관이 했더니 참으로 믿기 어렵다. '국민정부'는 우리 사회 민주화의 결실로 성립된 정부임을 자처하고 있는데, 그런 정부의 장관이 소수

대학에만 특혜를 부여하겠다고 했다니 하는 말이다. 소수와 다수의 구분과 차별화는 대학의 서열화를 강화하게 된다. 소수 대학만이 우리 사회 엘리트 공급을 독점하게 된다. 이보다 민주적인 대학정책과는 거리가 더 먼 정책이 어디 있겠는가? 몇몇 '우수대학'을 만든다고 학문과 교육의 진흥이 성취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엘리트주의적 발상으로서 체육진흥을 위하여 태릉선수촌을 만들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덕단지나 과기원을 설립하는 것과 진배없다. 태릉올림픽촌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최근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선전을 하지 않았느냐고 할지 모르나 그런 운영은 군사정권 아래서 시행하던 것이요, 그렇게 하여 혜택을 보는 이 역시 소수일 뿐이다. 엘리트 중심의 체육, 과학기술, 학문 정책을 펼친 결과 국민건강이나 보건, 과학기술, 학문의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하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국가경쟁력이나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원정책의 발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 전환은 우리가 학문을 발전시키고, 차세대 전문인 교육을 함에 있어서 민주적 원칙에 입각할 때 비로소 제대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중심대학'을 만들고, 소수의 연구중심대학을 선정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대학원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대학원정책의 기초를 설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은 그런 원칙과 기초를 실현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방향을 대학의 '구조개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중심대학과 대학원중심대학 정책은 지금 사회 곳곳에서 전가의 보배처럼 사용되고 있고 대학정책 일반에도 적용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구조조정은 기업에서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기법이다. 기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운사이징을 하고 사업체 맞교환을 하고, 노동의 유연화를 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대학에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것은 대학을 기업처럼 간주하는 것이나,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내는 것인 데 반해 대학은 인재를 길러내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고자 한다. 대학이 필요로 하는 것은 기업식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학사회에 걸맞은 '구조개혁'이다. 구조개혁은 연구와 교육, 그리고 학문의 발전이라는 대학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의 기능을 저해하는 비학문적 비민주적 악습과 관행을 철폐하는 것으로, 대학 내 독점적 세력을 타파하고, 관료적 행정구조를 개혁하며,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제 기제를 혁파하는 일로 이루어진다.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구조조정과는 당연히 원칙과 목표와 절차가 다르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개별 대학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많은 대학들을 '대학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혹은 일부 대학들의 독점적 지위를 허용하는 대학개혁 방식으로서, 개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경쟁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경쟁은 무조건 나쁘다거나, 구조개혁은 경쟁을 무시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무조건 경쟁 제일, 무한경쟁으로 나가는 것은 극복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운영을 경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많은 대학들이 퇴출당하거나 일부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의 특권화가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기업사회에서 이런 일은 부지기수로 일어나는데 시장의 경쟁 격화를 통해 세상이 과연 좋아졌는가? 대학사회는 경쟁논리보다는 공존의 논리를 취하고, 제가 살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제로섬 게임보다는 서로 살리는 상생의 삶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대학의 구조를 기업논리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개혁하자면 일차적으로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패들, 악습들, 독점권 등을 일소하는 방식으로 대학개혁을 진행하고 대학원정책에도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학원의 정상화가 대학원 개혁과 발전의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한 대로 한국의 대학들은 부실 정도가 너무 심해 대학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대학들이 별로 없다. 대학졸업자들이 대거 외국 유학을 떠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국내 대학들이 대학원교육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전국 대학들 중 대학원 운영을 하려 들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학부 수준 교육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면서 대다수 대학들이 대학원 운영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 대학원을 통해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과도한 학부 수업에다 대학원 수업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대학원의 파행적 운영 사례는 그래서 허다하지만 단지 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교육현장에 남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학원중심대학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대학원을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지난 8월 2일 교육부가 “일반직업인 양성에 집중할 교육중심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에 대해서는 과정을 취소하거나 없애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일부 맞는 구석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학원의 정비와, 그 정비를 구실로 삼아 교육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대학의 차별화는 다른 문제다.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대학의 악폐, 비민주성, 독점적 관행 등은 없애야 하겠지만 대학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대학들의 상호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 그런 점에서 구조개혁은 대학들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는 쪽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양화 및 특성화 정책은 “소수의 연구중심대학”과는 다른 원칙에 입각한 대학발전 전략이다. 일부 대학들에게만 대학원 운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대학들이 대학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특성화 전략에 따르면 지방의 영세한 대학도 일부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대학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원 운영권을 일부 대학에만 특혜로 주는 것보다는 더 많은 대학들이 더 내실 있는 대학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 사실 소수 대학에 고급과정을 집중시키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역행되는 일이다.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인터넷이 탄생한 경로를 생각하더라도 이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 미국의 방위 전략으로 국방성의 방위체계가 피폭되어 망가진 이후라도 정보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정보소통의 네트워크다. 정보의 집중화가 아니라 분산을 겨냥한 네트워크 체제로 오히려 정보의 소통이 더 원활해진 것이 인터넷의

교훈이다. 대학원과정을 소수 대학에 밀집시키는 것은 학문, 과학, 기술의 발전의 병목현상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학문의 다양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더 많은 대학이 내실 있는 대학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특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대학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획일적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학문과 교육의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대학원중심대학’ 정책은 학부제와 마찬가지로 획일적인 정책이다. 물론 교육부는 연구중심대학이든 학부제는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겠지만, 최근 교육부가 개혁의 미비를 들어 서울대를 우수대학 대열에서 제외시키고 그와 관련된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자신의 복안대로 대학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차별화와 획일화를 통해서는 대학 발전을 이룰 수 없다. 다양화와 특성화가 대학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최근에 방한한 옥스퍼드 대학의 루커스 총장도 “대학별로 특성화된 전문영역을 키워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조정 핵심이라고 피력한 적이 있다(조선일보, '98년 9월 25일).

구조의 조정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 것은 대학원의 운영과 제도를 민주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원중심대학 정책의 도입으로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의 제도와 그 운영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대학의 운영이 개선될 가능성은 클 것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경쟁을 통해 경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져도 대학 운영은 많이 개선될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학문과 교육의 발전이 재정의 확보, 경영 합

리화, 행정 조직 전환 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외형적 조건의 개선 이외에 좀더 근본적인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 지원이 확대된다고 학문과 교육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학문의 발전에는 학문 패러다임을 개혁하는 일이 포함되는데, 이 개혁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문제로 제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학문의 여건 조성이 시설물, 재정, 행정 문제에 국한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정의 배분도 그래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교육부는 재정의 확보가 어려운 만큼 소수 대학 지원을 교육정책으로 내놓는 것이라 하겠지만 어려울 때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해서 지혜를 동원해야 하는 법이다. 재정이 부족한 형편인 만큼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맥락에서 현재 국내에는 제대로 된 도서관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이 있지만 이들 기관의 문헌정보 서비스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대학원중심대학을 세울 일이 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전쯤에 제대로 된 도서관을 하나 세워 거기에 가면 거의 모든 자료들을 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학문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더 클 것이다. 대학별로 재원을 분배하는 것보다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아니면 대전 정도에 새로운 연구도서관을 설립하고 대학도서관들은 이 도서관과 정보를 교통하는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것이 더 낫다. 아울러 재정 지원 형식을 빌지 않고서도 대학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와 교육의 환경은 시설물이나 실험기자재

같은 하드웨어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소프트웨어 차원의 개선으로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고, 나아가서 콘텐츠웨어 부분에서는 정책 전환만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연구와 교육의 환경 및 조건을 개선하는 일은 다수 대학들이 수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 대학, 소수 대학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특성화를 통한 다양하고 건강한 대학상 구현이라는 바람직한 대학발전 전략을 방기하고, 학생과 국민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일로서 대중적 저항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대학원 교육의 혁신을 위한 또 다른 길은 대학원의 실질적 기능을 바꾸는 일이다. 대학원에 부여된 주된 사회적 기능은 대학에서 수행되는 연구와 교육을 심화하고 그 심화를 통해 전문인력과 연구자, 혹은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일일 것이다. 나는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사안 가운데 하나가 교육과정의 문제라고 본다. 연구와 교육은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설정된 문제들을 푸는 방식을 어떻게 강구하며, 이런 실천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배치하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교육과정은 수업으로 배치되는 협소한 의미의 교육과정만 가리키지는 않는다. 중요한 지식생산 현장인 연구소, 실험실 중 상당수는 교육보다는 연구에 치중하는 관계로 협소한 의미의 교육과정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역시 어떤 과제가 설정되어 있는가, 그 과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느냐가 결국 문제라는 점에서 교육과정이 가동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원의 혁신은 교육과정을 둘러싼 혁신이고, 이 혁신을 위해서 대학의 기능과

제도, 조직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 가라는 문제가 된다.

구조개혁 관점에 서면 연구와 교육의 사회적 기능도 바뀌어야 한다. 대학개혁은 무엇보다도 대학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전환시키고 그 기능 전환을 위해 대학의 조직을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 대학은 그 동안 고학력노동자의 과잉공급을 주요 기능으로 삼아왔기에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 앞으로 대학의 기능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생산성'은 자본주의적 생산성, 혹은 자본주의적 효율성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자본주의적 생산성은 자본 축적의 효율성과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봉사, 공존, 유대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다. 자연자원의 파괴와 공해 유발, 인간 소외의 심화를 부추기는 것들도 '생산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자본주의적인 생산성 논리다. 인간이 향유해온 물과 공기, 풍경 등 자연생태도 상품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 이윤만 챙기면 그만인 것이다. 반면에 사회적 생산성은 자본축적과는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공익성, 자연자원의 보존, 사회적 유대관계의 강화 등에 도움되는 것들이 지닌 성격이다. 교육의 사회적 생산성은 교육이 이윤 축적만이 아니라 사회의 자유와 평등, 환경 보존에 도움이 될 때 나타난다.

끝으로 대학원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 주체적 역량은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나온다. 전국의 대학 교수들은 학부교육에도 제대로 전념하지 못할 정도로 교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학원교육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근무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문의 패러다임을 쇄신하고 실험적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에 대한 교수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며, 다양한 연구 및 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대학원 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교수 못지 않게 학문후속세대인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일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는 대학원생을 맡은 교육 혹은 연구 조교로 채용하면서 실제로는 행정조교로 부러먹는 일이 만연되어 있다. 행정직원이 너무 많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대학에서도 직원을 학과나 실험실, 연구소에 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학원생을 이처럼 사무요원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학원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대학원생의 후생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를 올바르게 대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은 학생들이 대학원에 재학중일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졸업 후도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될 필요가 있다. 강사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과제다. 최근 '99년도 교육부 예산이 전년에 비해 5.1%가 깎인 가운데 국립대 강사의 급여를 시간당 5천 원(27.8%) 올린다는 보도(한겨레신문, '98년 9월 28일)가 있었는데, 그것만으로 학문후속세대를 제대로 구축할 수는 없다. 학문후속세대를 제대로 확보하려면 대학원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취업 전망이 밝아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현재 초·중등 교사의 질적 고양을 위하여 박사학위 취득자의 교사 취업을 적극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초·중등 교원은 지금 교육대학이나 사범대 출신, 혹은 교직 전공자 중에



서 임용고사 등을 통해 뽑고 있는데, 석·박사 학위 소지자 중에서 교사 채용을 하는 것은 고급 인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또한 초·중등교육의 질적 고양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범대 출신도 너무 많아서 임용고사에 합격한 사람도 제대로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박사학위 소지자의 초·중등 교원 채용은 초·중등교육의 발전 차원에서 고려해볼직하다.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원중심대학 혹은 연구중심대학안에 대해 다수 교수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훈 의원(국민회의)이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대학신문기자연합과 공동으로 전국 22개 대학 교수 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6.6%가 대학원중심대학안에 반대한다고 한다(조선일보, '98년 9월 28일). 학부 전공 교육이 부실해지고, 대학이 대학원입시 과정으로 전락하며, 고학력 예비실업자가 증가할 것

이라는 것이 반대의 이유인데, 대학원 교육 개선을 외면하자는 반응은 아니라고 본다. 대학원교육은 현재로서는 공식교육의 최고 과정으로서 사회의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대학의 구조개혁을 통해 이 중요한 과정의 획일화와 차별화를 불식하고 다양화와 특성화를 이루어 우리 사회 고학력 노동자의 능력 강화와, 엘리트층원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

강내희/서강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마케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문화이론전문지 『문화과학』 발행인, 서울문화이론연구소 소장,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운영위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문학의 힘, 문학의 가치 -탈근대 관점에서 본 문학범주 비판과 율호의 문제들", "문화공학을 제안하며", "IMF의 신자유주의 공세와 문화변동" 등이 있고, 저서로 『육체, 공간, 권력』, 『문화론의 문제설정』, 『지식생산, 학문전략, 대학개혁』 등을 발표했다.